## 국감 현장

광주 고·지법, 광주 고·지검〈법제사법위〉

# "법관 부족… 사법서비스 질 떨어져"

## "검찰·법원 어디가 높나"… 법원 우월주의 일침
## "공안검사 줄여야" "공안기능 강화해야" 논쟁

24일 열린 광주 고법·지법과 광주 고검·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문제 등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졌다. 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남편인 이태운 광주고법원장도 한때 '표적'이 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법관 부족…장기공판 많아=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은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법과 지법의 법관 결원으로 인해 재판기간이 길어져 사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해결책을 촉구했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판사 정원은 27명인데 반해 현원은 17명에 불과해 결원율이 37%로 대구고법과 전국 5개 고법 가운데 가장 높은 판사 부족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결원율은 최근 3년 연속 30% 안팎을 기록했고, 이는 고스란히 법관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1인당 담당 사건수가 2003년 164.4건, 2004년 167.1건으로 전국 고법 중 가장 많았으며, 올 들어서도 현재 144.6건으로 지방 고법 중 최고치다.

이로 인해 장기미제 공판도 자연스레 증가, 광주지법에만 항소심을 포함해 모두 239건의 형사공판사건이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조비리=군산지원의 법관 비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오세욱 전주지법원장을 상대로 "올해 군산지원 판사 3명이 업자로부터 아파트와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옷을 벗은 사건이 있었다"면서 "며 "이처럼 사법부가 지역 토착세력들과 어울리는 현실에 대해 법원에 한때나마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헌재소장 임명절차 논란=이태운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아내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절차 등을 묻는 의원들의 다소 엉뚱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절차 위헌·위법 논란과 관련, 이 고등법원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자진사퇴 요구는 정치공세며 국회가 알아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했는데 현직판사로서 '정치공세'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이태운 광주고법원장은 "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적인 문제를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다"며 의원들의 질문을 피해갔다.

◇법원 우월주의 비판=민주당 조순형 의원의 법원 우월주의에 대한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질의에 앞서 느닷없이 이태운 고법원장을 향해 "검찰과 법원청사 중 어디가 더 높은 지 아느냐?"고 질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순시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검찰 청사가 법원보다 1cm라도 높게 설계돼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들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고법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었다.

◇공안부 역할론=광주고검과 지검에 대한 검찰의 공안부 역할을 놓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의원은 "공안사건의 86%가 노동사건이고 노동사건의 대부분은 체불 임금사건"이라며 "실제 공안사건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공안 검사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안부 역할 축소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공안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며 공안부 역할 강화론을 펼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광주지방법원 대회실에서 광주고·지법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영광원전〈과기정위〉

# "주민 갑상선암 발병률 조사 결과 왜 다른가"

24일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회 과기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서로 다른 '영광 주민 갑상선암 발병률 조사' 결과가 논란이 됐다. 또 영광 주민들이 타지역 원전 주민들에 비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불신이 높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영광 주민 갑상선암 발병률 조사 논란=열린우리당 유승희(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은 "지난 1997~1999년 실시된 영광 주민 갑상선암 발생률 조사와 2004~2006년 조사 결과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영광원전에 해명을 요구했다.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지난 1997~1999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영광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전남의 타 시·군 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한수원 산하기관인 '방사선보건연구원 전남대 의과학연구소'의 2004년 7월~2006년 6월의 조사 결과에서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영광 주민 원전 불신=한나라당 김희정(과기정위)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올 2월 영광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49%가 '안전성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원전이 있는 울진·고리·월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는 39~42.5%의 주민들이 '불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영광 주민 10명 중 9명은 원전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영광원전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게을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지적 많은 영광원전=한나라당 김태환(과기정위)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국내 원전은 총 545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이 중 영광원전이 189건(3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적 사항 중 33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 17일 ▲고리 1호기 ▲월성 3호기 ▲영광 4호기 ▲울진 3·4호기에서 진행된 '불시 방사선 비상소집훈련' 응소율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때 영광원전 '비상기술지원실'의 응소율이 70%에 그쳐 가장 낮았다며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김효석·최인기·이낙연·이영호 의원

# NGO 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

김효석의원 최인기의원

이낙연의원 이영호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2006년 국정감사 중간평가에 나선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를 모니터한 이후 6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효석 의원(담양·장성·곡성)은 중간 평가 결과, 무난하게 우수의원 명단에 포함돼 7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 '을 바라보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로 상임위를 옮긴지 3개월도 되지 않았는데도 우수의원 대상에 포함돼, '절정의 내공'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으로 행정의 달인으로 꼽히는 최인기 의원(나주·화순)도 우수의원 대상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건교위에서 행자위로 상임위를 옮긴 뒤 행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행자부 공무원들로부터 '존경할만한 선배'라는 평을 받고 있다.

르포 국감의 원조인 이낙연 의원(영광·함평)도 현장을 발로 뛰며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로 '국감 우수의원'에 포함됐다.

한편, 열린우리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이 유일하게 우수의원 대상에 포함됐다.

모니터단은 이날 "56명의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며 "국감종료 이후 정밀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우수의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현직 의원이 국감 참고인 출석

## 서갑원의원 "마사회, 순천 화상경마장 백지화 하라"

서갑원의원

순천 화상경마장 건립을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순천)이 한국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 눈길을 끌었다.

2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서갑원 의원은 인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이날 오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 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자발적으로 타 상임위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한 것은 헌정사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일. 그러나 서 의원은 한국 마사회가 순천 화상경마장 건립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직접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업의 부당성을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결국 국회 농해수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오후 서 의원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나타내자 '설마'했던 한국마사회 측은 당혹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마사회 측이 무리하게 순천 화상경마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등 동료애(?)를 보였다.

서 의원은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한국 마사회가 2번이나 순천 화상경마장 건립 취소 공문을 보내 놓고서도 비밀리에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 승인 당시 제출된 시민 1만3천명의 서명은 조작된 것"이라고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국정감사 이후 서갑원 의원은 "화상경마장 건립시 '해당 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순천, 원주, 청주 등은 다시 주민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